

제42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11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안부차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1시02분)

○소위원장 위성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 대리 출석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2회 추경안은 경기, 민생, 안전에 중점 투자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은 심사 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증감액 1건과 부대의견 4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 심사하기 전에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발언하기 전에……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행안위 추경 심사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으나 한번 훑어보니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그리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 지금 우리 추경안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와 관련 없는 항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그때 항목에 따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경 사업은 총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2건이 증액되었고 우수 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 1건,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대하여 증액 1건, 부대의견 2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의견 1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 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전남 진도군의 소포지구 석교천 유역 소포방조제 정비를 위한 조사·설계비 국비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성화·한병도 위원님의 제안입니다.

2페이지,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예산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관련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상식 위원이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관련 이전의 재해 사례를 참조하여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재심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지원을 통해 인명 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주민 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준공 내지 사업 기간 단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상식 위원님 제안입니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 지방비 확보 문제를 점검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집행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해식 위원님 제안입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한병도 위원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전체적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재해위험지역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구 지정의 선행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서법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추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올리지 않는 걸, 좀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유독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구 지정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도 선결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올라온 부분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해지역 정비해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고 올리지 않고 이것만 유독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가 많지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위원님,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증액이 된 사업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다 확인을 해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은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서법수 위원 다 들어간 거고?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예, 31개소가 증액이 됐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 사안은 정부가 올린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을 한 사안이지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했고 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중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대의견 4건은 정부에서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소위 자료 문구대로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

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행안부차관 소관 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진작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조 296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6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 안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25억 원,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에 15억 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1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민생경제 지원 등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차관 소관은 심사 대상이 많으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 등 산불피해 지역주민에게 공공형 긴급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로 50억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방비 16억 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25년 6~7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이어서 25년 8~12월까지 국비분으로 해서 770명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정 당국과 협조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신다면, 여기서 추가가 안 된 부분이 경북 5개 시군이 있는데요. 경남의 하동·산청과 울산의 울주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포함을 시켜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포함시키면 얼마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까, 추가로?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56억 55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6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플러스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경북의 산불지역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건데요. 우선 1차로 1단계에 6~7월에 770명 했는데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6~7월만 하고 또 집에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되어야 되고. 이번에 추경도 해 주고 차관님께 당부를 드리면 산불이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업을 하기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 3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경남, 울산까지 합쳐서 경북이 요청한 70%, 122억 6200만 원 플러스 그 외 지역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하나만, 박수민 위원안 중에 지금 국비 50억 원은 지방비는 포함이 안 된 안인 거지요? 전액 국비로만 돼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어려운 지역 돋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이거 보내 주면 지방비하고 매칭 안 시켜 줍니까?

○**이달희 위원** 매칭시킵니다.

○**서범수 위원** 국비를 내려 보내 주면 지방비도 좀 매칭을 할 건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이 안은 100%고요. 과거에는 한 90%로 했던 사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 안은 국비만으로 하겠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냐하면 역대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저도 해당 지역이라서…… 이게 경북만 한다 싶었는데 차관님이 또 경남하고 울산 지역을 포함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제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

○**서범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차관께서 제안하신 경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합계 50억 500만 원에 56억 6000만 원을 더해서 증액하는 안을 제안을 드리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6억 5000만 증액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총 증액은……

○**박정현 위원** 56억 5500만 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50억 500만 원이 5개 시군이고요. 거기다가 울주군하고 경남 하동·산청이 들어가면 6억 5000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총액이 56억 5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3개 지역은 인원이 더 적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총액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56억 5500만 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간단히, 박스에 보시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571억인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에 국비 2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일단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역발전계획에 이 사업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지역발전계획서 변경 협의가 선행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재정 당국도 아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반영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재부는 이게 지방이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에 동의를 잘 안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 53억 28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본예산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이것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게 아니고 기존의 지역발전 활성화의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포함은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유보가 되어 있고 소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문체부는 이 사업이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에 지방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챙기고 있지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차라리 행안부가 이걸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실무 협의를 했을 때는 이건 이양된 사업이니까 굳이 여기다 넣어서 또 국비를 해 주지 말자…… 처음에 이양할 때 통으로 이 관련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위원장이어서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류해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산불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청년공동체에 지원해 주려는 것으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10개 단체에 20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억 그리고 그 사업관리 비용으로 6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산불재난지역 대상 청년공동체들이 활동하면 지역 공동체가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2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산불지역이 발생했고 그 지역에 청년공동체를 통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산불 난 지역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회복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상황이, 이게 무슨 20억도 아니고 2억 6000 정도인데 이걸 갖고 재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바로 박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 하자는 거지요? 이거 신규사업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신규사업 하자는 건데요? 신규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이지요, 이것?

○박정현 위원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청년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산불지역에 대해서 특화된……

○서범수 위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들어가는 항목이지요, 이것?

그리고 또 하나는 10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10개 단체를 임의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산불재난지역에 지역공동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청년단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8개 시군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개를 뽑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공모라든지 신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것 아니냐, 예산 투입하기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개를 뽑고…… 많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아까 경북, 울산, 경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안동이라든지……

○서범수 위원 그런 데에 이걸 투입해서……

한 지역에 하나 정도겠지요, 10개라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면 8개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게 나옵니까, 그걸 만약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이게 된다 그러면 의미 있고요. 젊은 청년들 중에 사명감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청년마을 육성한 것도 51개 마을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청년마을이 활동하면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사회 공헌하는 데들이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친구들이 기특하고 잘하라고. 그래서 이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 준다거나 병원에 가는 것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옛날 농활이지만 이게 좀 특화된 이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그 정도의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많으면 추경으로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도 금액이나 사업 취지에 이견은 없는데 집행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에 가면 기존의 4-H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있던 걸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무슨 이바구마을이나—청년들은 이름을 조금 독특하게 짓더라고요—그런 청년타운, 청년마을을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트레킹을 하는 걸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산불피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수민 위원**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원 대상에 기존의 단체들은 배제되는 제한된, 어떤 접수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예.

○**박수민 위원** 접수받을 때 제한돼서 받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원래 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 응모를 안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니까 활동 계획이라든지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해서 심사를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프로포절(proposal) 사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제안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 심사해서 하는 단체들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단체가 꼭 경북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단체도 가서 청년들이 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원래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오면 제일 좋은데 아마 이 산불피해지역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산불피해지역에, 안동이라 그러면 안동이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시내나 여기에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게끔 홍보하고 사업 예산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더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금액……

○**양부남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해 주자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해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산불 난 지역에 긴급재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산불피해지역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무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저는 해 주는 게 좋다, 일자리 창출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명확하게 좀 하지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안동이라 합시다.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섞여 있던데 서울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들어가서 안동 지역으로 가서 활동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안동 지역에 있는 쪽에 가점을 줄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지요, 다 들어온다면.

○**김성희 위원** 여기 사업 개요의 지원대상에 보면 산불피해지역 내 청년공동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거기에 우선을 주고 그런데 역량이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또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선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거기에 우선권……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공모사업도 하고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이건 자치단체장은 크게 관여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예, 행정안전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6000만 원 운영비에다가 보통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대행을 맡길 생각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10개 뽑아서 각 자치단체에 나누어 줍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직접 합니다.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자치단체에는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중간 직속기관을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관리기관을 우선 선발해서……

○**서범수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예, 관리기관이 교육도 시키고 회계서류 쓰는 것부터 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전에 2023년까지 청년공동체 활동 사업을 자치단체가 했는데요.

○**서범수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하고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이게 실제로 되면, 시장·군수님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 청년들 단체를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왜냐하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일하는 공간 같은 것을 빙집 같은 걸 정비해서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요.

○**이달희 위원** 5명이 2000만 원 갖고 지역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급여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부남 위원** 급여가 아니지. 청년들의 봉사 개념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내용과 사업, 금액 다 좋은데 행안부가 지금 지자체 업무까지, 거의 시청·군청에서 할 일을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이걸 왜 직접 선발해서 하는지 저는 그 업무 역할 체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그 부분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까지도 지방정부를 연방정부 차원으로 키우겠다, 저는 그 취지 동감하거든요. 지역은 지역에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을 지금 왜 행안부가 공모해서 직접 뽑아서 전국에 뿐리겠다는 건지 저는 행안부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사업 좋고 다 좋은데 지자체에 위임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자체 시도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마을을……

○**박수민 위원** 아니, 그것은 지자체의 역량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행안부가 지역에 누가 활동하는지, 물론 전국의 260개 기초자치단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비켜 줘야지. 역할 침범입니다, 이건.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번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내역사업 두 꼭지와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획전, 품평회 등 간접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이것은 단체를 선정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직접 주는 보조금 사업으로 29억 5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제안이고요. 29억 5500만 원 증액의 산출내역을 보시면—박스에 있습니다—신규 마을기업 57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72개소, 연합마을기업 3개 연합 해서 29억 5500만 원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마을기업 육성과 간접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마을기업 사업의 지속된 사업인데 기재부가 법에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사업이어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이 법이 여당 위원님 세분과 저 비롯해서 법안1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다 살아날 건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꾸준하게 이어 오던 사업이라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증액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4번은 증액 의견대로 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제가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되어진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측 안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안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지금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 지자체가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그 비용으로 2조 9000억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사업 취지라든지 국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또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행안부 입장은 뭐예요? 원안 유지예요 아니면 국비를 다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 유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신정훈 위원님 의견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찬성해야지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왜 우리하고 의논도 잘 안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20%씩 맡기느냐 거기에 대한 불편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또 지방재정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100% 국비로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없지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몰라도 행안부나 행안위 입장에서 보면 100% 국비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신정훈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이달희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건 없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의견을 좀 남겼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이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부대의견은 이따가 할 때 논의를……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 논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6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안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이해식 위원님 제안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거는 원안 유지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 유지로 들어온 것은 표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안 받고 원안에 대해서 변경안이 있을 때 심의하도록 하고요 원안 유지라고 되어진 안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단지 대행사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 지금 도대체 그것 몇 %대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0.1에서 한 1% 미만인데요, 대행사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라든지 쿠폰 발행 규모, 상품권 발행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릅니다. 레인지는 한 0.1에서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거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부대의견에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몰라도 행안부 자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수수료 자체를 좀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에

달아 주셔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행안부에서 수수료 관련돼서 전체 점검하시고요 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8페이지 7번 사업 인건비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군경력 및 유사경력 적용을 위해 24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좀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9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군경력 같은 유사경력이 인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분들은 비슷한 경비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추가 의견인데 사실 그 당시에 다 협의가, 정규직 전환 협의에서 결정이 났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군경력과 유사경력 다 인정이 됐었는데 계속 이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군경력은 인정해 드렸고요 군경력을 제외한 유사경력, 다른 사기업체에서 경비를 섰거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사경력은 미인정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있어서 그 부분 그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요구사항 정리해서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자료 9쪽입니다.

연번 8번 사업,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필요예산의 50%만 금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 100% 지원을 위한 19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주센터가 11억 50만 원이고요 제주센터가 8억 535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반면 제주센터 국비 100% 지원을 위한 8억 5350만 원 증액과 이용자 증가를 감안하여 동 센터 인력 7명 증원을 위한 필요경비 11억 6150만 원 증액 등 총 20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광주센터, 제주센터 모두 국비 100% 지원을 위한 증액을 말씀하신 거고요. 위성곤 위원장님 안은 제주센터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양자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순증 요구안은 국비 100% 지원안 19억 5400만 원과 제주센터 인건비 증액안 11억 6150만 원을 합한 31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행안부는 이 증액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 작년 출범할 때부터 계속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려고 노력은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 당국은 국가와 지방이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서 내 가지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40억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절반으로 줄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국립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원인 책임은 국가에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행안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에서 민주화 사업 지원비로 6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립 트라우마센터가. 이런 취지를 살리시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광주는 11월경에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정말로 민주화 사업을 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민주화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 의구심을 자아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전액 반영해서 기재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하고 제주만 있나요, 전국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거는 민주화운동이라든지 국가폭력에 의한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트라우마센터는 또 별도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약간 다릅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현재 50%만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제주하고 광주에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지방비 50% 부담을 하고 있고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는 올해 예산을 부담 안 해서 국비 갖고 6월 31일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국비 떨어지면 운영을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위낙 강경하게, 작년에는 그래도 부담을 해 주셨었는데 올해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부남 위원** 제주도는 인력 지원을 요청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광주는 금년에 시에서, 강기정 시장이 돈을 못 내겠다, 대신에 사람을 4명인가를 파견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시청 공무원을.

어찌 됐든 그래서 그 돈이 세이브가 돼 가지고 11월까지는 가는데 11월 이후에는 운영을 못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사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신 안대로 31억 1500만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31억이야?

○**소위원장 위성곤** 2개를 합치면……

○**박정현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서범수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양부남 위원** 제주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주에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주에 인력 7명을 증원하는…… 왜냐하면 제주는 4·3 피해자들이 1만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의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될 이유가 광주 국립트라우마센터도 국립으로 개원한 작년 7월 이후로는 이용자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시 한번 관련해서 잘 정리해서 기재부에 행안부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예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병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총 16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항입니다.

11쪽, 1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할인율을 10%로 고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할인율이 추경안에는 7%, 10%, 13%, 15%, 유형별로 다른데요 부대의견안에서는 10%로 동일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률을 원래 5%, 5%, 5%, 5% 이런 것에 대해서 8%, 5%, 2%, 0%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부 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캐시백 등의 이용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3번,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4번, 행정안전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소상공인이 밀집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보고드릴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여기 내용 중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이 있나요, 혹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없고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소위원장 위성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할인율을 10%로 고정하자는 것은 지방에 현재 5%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은 1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데서 부담을 할 때는 할인율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어려운 지역에서, 무슨 뜻이냐 하면 할인율이 높으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분들이 15%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소비, 상품권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면 그 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원해야 상품권을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도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254개 지자체 중에 거의 180개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조정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 검토 의견 드리고요.

또 캐시백 같은 경우도 이것은 결국 국비로 지원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사용 후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우려돼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이걸 계속한다 그러면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상식 위원님, 부정사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팀을 꾸려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용혜인 위원님 이거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사항이 아니어서 조금 뒤로 미뤄 놨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 상품권이 아니구나.

이상식 위원님 두 건 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상식 위원님 건은 저희가 유사 업종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30억이 넘어가도 가맹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6월 20일 개정을 했습니다. 이 취지를 반영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받기가 어려운 게 1번과 2번이라는 말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4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4번도 현재까지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필요가 없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1번 의견은 타당한 것 같고요, 정부 측 의견이.

2번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신정훈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관련 계획을 잘 조치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있다면 이것 잘 적절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캡을 씌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5%는 매칭을 해야 된다는 캡을 씌우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더 발행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자체 비용으로.

○**박정현 위원** 그런데 5%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지방재정이랑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할인율을 10%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하자라는 게 신정훈 위원님 안이고 저는 이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이 부분이 더 타당성이…… 15%, 그러니까 사실은 10%가 넘어가서 할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은 선할인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한 5%, 6%, 7%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지요, 지금. 지방 정부에서 10% 해 주고 중앙에서 10% 해 주면 20%니까 훨씬 좋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0%가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10%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을 5%로 씌우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위원님은 5%보다 낮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씀 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신정훈 위원님 안은 13%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로 하고 그 안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2%든 5%든 이렇게 가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위성곤** 예, 말씀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차관님, 우리가 해마다 한 3000억 전후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회에서 계속 증액해 왔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작년에……

○이달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4000억 했잖아요. 지방에서는 돈을 탈탈 끌어서 4000억 했어. 그리고 지금은 아무 생각 하고 있지 않다가 6000억을 받아서 분배해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사전에 받아 보셨습니까? 사전에 우리는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6000억 나온 거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냥 결정해 가지고 6000억 정도라고 지금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게 선물이 아니고 폭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훈 위원, 아까 180개 정도가 10%면 5% 안 보태고 그냥 가자는 의견이잖아요, 다 합쳐 가지고 10%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10% 주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에 10% 주는 것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까지 반드시 5%를 넣을 게 아니고 거기는 본인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재정 여력이 있으면 5%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으로 하는, 자율로 맡겨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입장인 거고요. 인구감소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만 할인 받는 것보다는 15%를 할인받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이 목적이 일단 어려운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경기 이런 수도권이나 좀 있는 데보다 인구감소지역은 그만큼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15%를 할인해 주자, 그래서 여기서도 매출이라든지 콜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전국 동시에 하면 10%를 해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양군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서 사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양군에서는 10%밖에 안 되면, 늘 주던 게 10%거든요. 그전에 작년, 재작년에 발행된 것도 10%니까……

○이달희 위원 지금 10% 하는 것도 거기다가 보태라고 하면……

경북 같은 경우에 547억 했습니까, 1차 추경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경북은 산불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달희 위원 많이 신청했는데 6000억을 또 하라 하면, 그건 중앙에서 10% 보태 주면 그걸로 해도 상품권 잘 팔리겠다 생각되는데 지방에서 또 5% 보태야 되는…… 지방채를 다들 발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제가 시장·군수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빚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 다 같이 하면 효과도 별로 없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그 지역에 있는, 이것은 영양군에 있는 군민들이 많이 사 주는 거예요.

○이달희 위원 물론 그런데……

○박정현 위원 효과는 지역마다 다 있는 거고요.

○이달희 위원 지역마다 있지만 그냥 자기가 사는 생필품을 쓸 뿐이지 과소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되면 이 상품권의 효용성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전까지는 10% 할인해 줬는데 이번에 하는 기간 동안은 15% 할인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좋으니까 그걸 더 많이 사겠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왜냐하면 이 돈이 할인되는 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소비를 해야 되니까 결국 안 쓰면 이건 내 돈이 안 되는 거여서……

○이달희 위원 기한 내에 소비해도 돈이 다 합쳐서 제일 많은 게 그 지역에서 200만 원이잖아요. 자기 생활비를, 생필품을 대신해서 사는 효과밖에 없다고들……

○박정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효과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거라도 소비를 하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미뤄 둔 것들을……

○박정현 위원 못 사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다가 조금 더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4000억 평소에 하던 만큼 했는데 6000억이 내려가면,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지방재정 부담이 있다 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건 확실히 있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부담을 지금……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경제효과나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정훈 위원이 제안한 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짧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가져온다든지, 효과분석을 좀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지금 예산안에 분석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은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과거에 각종 한 10여 개 연구기관에서 한 자료는 상품권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어제도 박수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연구원은 평가가 되게 좋다, 어디는 부정적이다, 긍정, 중립적이다 이런 게 다양하게 있어서 딱 한말씀으로 드릴 수는 없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차관님, 그렇게 의견이 산재할수록 객관적인 의견을 받도록 집행부처가 노력을 해서 결과분석에 공을 계속 들여 가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여기저기 의견이 다르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를 할 거고요.

○양부남 위원 의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차치하고 신정훈 위원안을 받을 것이냐인데 제 생각에 신정훈 위원안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리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많

은 부담을 느낀다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행안부에서 할 문제지만 할인율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신정훈 위원안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것 갖고 생각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의 부담도 발생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로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더 강구책을, 예를 들어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아까 관련해서 차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 효과성분석에 대해서 부대의견 하나 달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효과성분석에 대한……

○**박정현 위원** 효과성분석은 충분히 다 나왔어요. 조세정책연구원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중에 나왔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 제가 보니까 이 효과에 관련되어서 어떤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판단인 것 같아요. 효과성분석을 하라고 부대의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잖아요, 효과분석? 그걸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 관계도 조금 언급을, 가능하면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아까 말씀 주셔서……

○**서범수 위원** 그것 넣어 주십시오. 안 들어가서 그래요, 부대의견에.

○**양부남 위원** 제가 1번과 관련해서 부대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을지 모르는데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역시 자치구의 수요조사도 해서 광역시 자치구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박정현 위원** 지금 광역시의 자치구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하는데, 지금 교부금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양부남 위원** 저는 이번에 좀 하자 이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도 부대의견으로 그걸 내고 싶어요. 국비 지원을 왜 광역을 통해서 기초에 합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역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게 광역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지자체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양부남 위원 직접 행안부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주도록……

○박정현 위원 기초에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내용에 저는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아예 안 주고 딱 잡고 내리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광역하고 같이 하면 광역이 보태 주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달희 위원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광역이 손을 떼면 기초자치단체가 손해지요, 오히려.

○박정현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관련되어진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지역사랑상품권이 구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한다 이 정도로 해서 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부대의견 넣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효과성분석도 넣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효과성분석도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분석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 효과성분석에 하나만 붙일……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이달희 위원 실태 파악을 안 하셨지요? 상품권을 누가 언제 어떻게 쓰고 이런 실태 분석이 거의 안 된 것 같던데 이번에 한번 실태분석을 예산을 집행해서……

○소위원장 위성곤 실태분석하고 효과성분석 할 예산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존에 있던 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떻든 간에 조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실태조사는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부분은 부대의견을 수석전문위원님이 문안을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소위원장 위성곤 2번 안은 정부 측에서 의견 낸 대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

니 관련되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게 되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부가 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아니고, 그렇지요?

4번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추가적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걸로, 이상식 위원님 것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소위원장 위성곤 4번도 삭제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4번 삭제고 1번은 논의하신 대로 워딩을 저희가 정리해서 마련하고요. 2번은 삭제고 3번은 수용이고 4번도 삭제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삭제고.

5번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5번은 아직 논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제부터 할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5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급수단·사용처를 설정한다.

6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별기준에 관한 형평성 및 행정비용 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보편지급한 뒤 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하여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7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한다.

8번, 행정안전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기된 카드사 수수료 문제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 적절한 소비쿠폰 유효기간 등에 대해 검토한다.

9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10번,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편지원 방식을 취하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11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수급대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 매칭구조 도입을 고려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5번은 수용이고요.

6번의 과세소득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걸 수용하기는 어려워서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쿠폰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요.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쿠폰 줬다고 해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수당, 아동수당이라든지 노인수당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과세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매칭 비율 조정도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부분 해서 이것도 일단 이번 시점에서는 신중 검토해 주시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도 의결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8번은 일부 수용해서 금융위원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진작 효과 등 해서 발표는 저희가 추경안 통과되면 아마 그다음 날이라도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9번은 수용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번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서법수 위원 잠시만요.

10번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편지원 방식을 취하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 국민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법수 위원 전 국민 대상으로?

○박정현 위원 1차는 어쨌든 전 국민적 사업인데.....

○서법수 위원 1차는 15만 원이고 2차는 다르게 나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 빼고 다 90% 나가는 거.....

○서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괄, 25만 원이면 25만 원, 45만 원이면 45만 원 식으로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하겠는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거로.....

○서법수 위원 그 뜻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보편지원 방식을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만 한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2차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 워딩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입장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안 받는다면 2차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5번 행

안부 수용하는 부분에 위당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광희 위원** 이것 빼도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빼도 되겠네, 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보편지원 방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10번 자체를 전부 다 빼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하는 그 부분을 저희는 보편지원이라고 보고요. 1차는 15만 원 다 주고 25만 원씩 다 가는데……

○**서범수 위원**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조항이. 뺍시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빼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10번은 그러면……

○**이달희 위원** 10번 다 같이 삭제하는……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11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조금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등적 매칭구조 도입을 하기에는 지금도 지역별 추가 지급 대상자 수를 사전에 산정, 확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또 2단계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산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5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아까 얘기한 10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반영하지 않기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6번인 경우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고 7번인 경우는 신중 검토 그리고 11번인 경우는 신중 검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9번에 경제적 효과 분석을 넣었는데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취지를 조금 남겼으면 합니다. 이런 취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 극히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환류한다’, 취지를 좀 적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취지를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취지는 여기에 담을 수가 없고요. 취지는 말씀하신 걸로 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효과 분석을 하는 걸로……

○**박수민 위원** 좋은데 그러면 소위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말씀하셨던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서범수 위원** 차관님, 그다음에 7번하고 11번 있잖아요. 신중 검토인데 당연히 이것은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신정훈 위원장님 걸로 국비로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올리는 부분은 7번하고 11번을 빼야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6번도 빼는 걸로 하셨지요?

○서범수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7번, 10번, 11번은 부대의견에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2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SOC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재정 집행률을 제고한다는 데 정부가 수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다음, 13·14번인데 이건 보통교부세 폐널티 제도와 지방채총액제한제의 개편과 관련 것입니다.

13번,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복지 지원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폐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번, 행정안전부는 지방채총액제한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발행조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3번과 14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2번은 수용이고요.

13번 같은 경우도 이게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타당성은 있지만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대안 의견을 드린다면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 노력 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폐지는 너무 센 것 같아 갖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4번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4번도 바로 하기에는 차등적 설계가 사실은 지금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한도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방식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달희 위원 완화하는 방식 검토한다, 오케이.

○소위원장 위성곤 15번, 16번.

○전문위원 조문상 15번, 16번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예산이 6억 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잘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번,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금번 추경 증액 예산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 현장 탐방, 중장기 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사료 수집 등 핵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6번,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통합 가능성 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콘텐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앞서 심사를 보류한 두 건이 남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3페이지, 4페이지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과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두 건이 남았는데요.

제가 평화대공원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역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박정현 위원** 예, 반영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은 위원님들이 제안한 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반대할 수도 없고 참……

○**박정현 위원** 이것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한번……

○**서범수 위원** 그것은 저도 오케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산불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서범수 위원** 산불은 오케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위원장님 거라서 내가 입을 댈 수도 없고 이것 참……

○**소위원장 위성곤** 회의 과정에서 미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취지에 맞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안 심사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서범수 위원 잠시만…… 차관님, 아까 부대조건을 달아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깜빡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이렇게 좀, 국비 자금의 신속한 교부와 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안 달아 주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지적을 받을까 봐 좀 소극적으로 하면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부탁드리는 부대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내려가면 다시 시의회나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재정법상도 없이 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대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공문에 담아서 신속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행하라고 하면 경제에 더 빠른 소비 진작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관련 내용은 부대의견 자구 수정 과정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성희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안전 예방정책실장 김용균